

“5·18 진상규명·역사왜곡 처벌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

| 일시 : 2020.5.18(월) 14:00 | 장소 : 광주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지도부 전일빌딩245서 최고위...조사위 활동 지원 광주·전남 당선자들 “5·18 관련법안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진상규명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 등을 약속했다. 또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기록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원형 보존된 광주 전일빌딩 245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5·18은 민주화의 동력, 민주정부 탄생의 기반이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다”면서 “우리가 언제가 개헌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이 3·1운동, 4·19 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에 대한 9차례 진상조사를 했지만, 철저히 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보장된 만큼 민주당은 조사위 활동을 전폭 지원해서 모든 진실이 낱알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퍼뜨리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치고 있다”면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1대 국회에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5·18 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방점을 뒀다. 김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이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사위가 5·18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

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가 우리 사회를 썩먹게 놔두면 안 된다”며 5·18 역사왜곡처벌법(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주 원내대표의 사과가 빛을 발하려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과 함께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5·18 유공자이기도 한 실촌 최고위원은 “광주학살 책임자인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형석 최고위원도 “이제 미래통합당도 적극 협치를 통해 40주년을 맞이한 5·18의 진실을 낱알이 밝혀 국민통합과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함께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갑석 광주시장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은 18석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선정을 받았는데, 그 의미 중 하나는 5·18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광주·전남지역 당선자 18명 전원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안을 공동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첫번째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인 만큼 현재 출범한 조사위 활동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 숫자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해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진상규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5·18 진상규명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당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현장 최고위를 마친 뒤 21대 국회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야, 내일 과거사법 처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비쟁점법 100건 의결 전망

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개정안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 시가지’로 정하고,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을 ‘재심 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정점이던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을 빼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합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면 이를 토대로 배상과 보상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고, 통합당 원내관계자는 “배·보상 조항은 졸속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100여건이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 법안 등이 본회의에 오른다.

다만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일부 코로나19 관련 법안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가 총선 낙선·낙선 의원들이 많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초선 당선인 30명 “세월호 진상규명 앞장”

민주당 목표 신항 찾아 세월호 추모행사 뒤 간담회

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30여명은 세월호 선체가 거처된 전남 목포시항을 찾아 세월호 앞에서 추모 행사를 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에 힘을 보탬 것을 약속했다.

박주민 의원은 추모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와 가족만이 아닌 사회 모순이 응축된 사건이다”며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고 발전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경기 안산) 당선인은 추모 행사 참가자를 대표해 “세월호 선체는 인양됐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유족들이 목표표 하는 7주기 전까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하루빨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7주기까지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되도록 마음을 다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장훈 4·16가족행 운영위원장은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국가가 무고한 국민 304명을, 우리 아이들 250명을 죽인 학살의 현장이고 참사의 결정적 증거이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끝까지 믿으며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탈출한 기다리던 공간”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프고 억울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모 행사 후 당선인들은 세월호 내부를 참관한 데 이어 박 의원의 사회로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4·16 연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오후에는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과 간담회를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 온 이낙연, 광주형일자리·인공지능 현안 논의

광주·전남 당선인 13명과 오찬...지역 사업 경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8일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13명과 점심을 함께하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도전과 대통령 선거 출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광주 현지에서 호남 지역 당선인 13명과 오

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와 인공지능, 광주 공공항 이전 등 지역 당선인들이 전하는 현안 사업을 경험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의견을 나눴다.

앞서 이 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내고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역사왜곡처벌특별법도 빠른 시일 안에 제정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화해와 통합 같은 5월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라며 “더디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5·18에 대한 평가는 진전돼왔다.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5·18을 헌법 전문에 담은 개헌이 대통령에 의해 시도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40년 전 헌혈과 주먹밥으로 실천된 광주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은 면면히 이어지며 발전해왔다”며 “올해 광주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구를 위해 병

원을 비우고 환자를 받아 치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시민의식과 연대의 실천에 전국의 국민께서 동참하신 결과로 대한민국은 방역 모범국가가 됐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회생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윤 당선인 사안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이같이 밝히고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철수, 헌법개정특별위 구성 제안

국민의당 최고위...“5·18 헌법전문에 담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위원회에서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국민 통합의 계기로 자리 잡게 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고 국민들

께서 동의한다면 5·18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권력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 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